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37
----------	-------

발의연월일 : 2023. 8. 3.

발 의 자 : 김영주 · 김정호 · 정필모
이원욱 · 홍정민 · 백혜련
강득구 · 강민정 · 이용빈
윤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핼리윈데이에 특정 주최자가 없지만 많은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경찰 등의 사전 안전관리 조치가 없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

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때에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제6항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립절차”를 “수립절차와 제6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활용 및 요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파악, 인파 분산 및 이동통로 안내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9조에서 같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위치 정보사업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의11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생 략) <u><신 설></u>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현행과 같음)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u>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제1항</u> 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③</u> ----- ----- <u>제1항 및 제2항</u> ----- ----- ----- ----- ----- ----- ----- ----- -----.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파악, 인파 분산 및 이동통로 안내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9조에서 같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u>수립절차</u>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 7. (생략)</p>	<p><u>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⑦ -----<u>제5항</u>-----</p> <p>-----<u>수립절차와 제6항</u></p> <p><u>에 따른 위치정보의 활용 및 요청</u>-----</p> <p>-----.</p> <p>제79조(벌칙)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의11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u></p> <p>5. ~ 7. (현행과 같음)</p>
---	--